

제250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 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 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 달러를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부패지수·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

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출 4천억 달러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은 디지털 전자 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

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 위기관리 시스템과 교통·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 지출 등 4조 5천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 달러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 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 온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

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기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 관광·레저 도시, 중·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 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

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 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 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러시아·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UN 등 다자외교 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과 '평택지원특별법안' 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 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

산담당 부처가 개별사업 위주로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 투자는 민간과 연·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안보 분야에 배분 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 만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